

산업변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 사례연구 : 금융업 -**

이한진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금융이란 :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자원배분 체계'
- 분석대상 : 간접금융(은행업) & 직접금융(증권업)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 취업자 수(2018) 854천명
- 설계사및모집인 (447천명)

금융 및 보험업(K)

64. 금융업

- 641 은행 및 저축기관(한국은행, 일반은행, 신탁, 금고, 저축은행)
- 642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자산운용업, 창투, 벤처캐피탈)
- 649 기타 금융업 (리스, 수출입은행, 카드, 캐피탈, 파이낸스)

65. 보험 및 연금업

- 651 보험업 (생보, 손보, 사회보험(건강, 실업보험, 산재보험))
- 652 재보험업
- 653 연금 및 공제업 (군인공제, 건설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61 금융 지원 서비스업 (금감원, 거래소, 증권사, 투자자문 및 일임업 등)
- 662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손해사정업, 보험대리점 등)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 취업자 수(2018) 274천명

[표 6-6] 각 금융기관의 근거법률에 기초한 분류

근거법	해당 금융기관
은행업법	일반은행, 특수은행, 외은지점
보험업법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업법	증권사, 선물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저축은행업법	저축은행
상호금융업*	신용협동조합, 농협, 수협, 산림조합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

## 금융기관의 경영방침과 경영결과는 공익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원칙

- ▣ 규제산업 :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강한 규제
- ▣ 금융기관은 주주의 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반국민의 돈으로 운영

[표] 금융의 3대축 은행, 보험, 증권업의 기본 재무구조(단위:십억원, %)

	자기자본	부채	총자산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은행업	210,749.5	2,956,438.4	3,167,187.9	6.65	1402.82
생명보험업	87,046.2	831,115.2	918,161.4	9.48	954.80
증권업	61,768.5	420,775.5	482,544.0	12.80	681.21

- ▣ 각 근거법률 목적조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은행의 지배구조 원칙'을 보면 금융 공공성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음.

*"금융업의 지배구조는 공공의 이익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 1970년대 ~ 2008년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 ▣ 시장질서 기반하여 '금융규제완화와 금융자유화' 추진
  - 금리자유화
  - 금융의 증권화(은행의 신용팽창 확대 계기, 자본시장 부상)
  - 겸업화, M&A를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 금융규제강화

- ▣ G20 정상회의 : 글로벌 차원에서의 금융규제 개혁(강화) 추진, 미국과 영국 주도
  - 바젤Ⅲ 도입으로 은행부문 규제 강화 : 자본규제, 레버리지 규제 등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대형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 비은행 금융규제(그림자 금융, shadow banking)
  - 금융소비자 보호을 위한 규제 강화
  - 금융기관 겸업에 대한 규제 강화

**But,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로도 규제완화 추세가 지속되었는데,  
G20 정상회의에서 규제강화와 본격 논의된 시기는  
이명박 정부(2008~2013년) 시절이었다.**

- 2017년 자기자본 기준 세계 1위 중국공상은행 3241억 달러  
KB금융지주 291억 달러로 세계 59위 (약 9% 수준)
- 2018년 자기자본 기준 세계1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98조원  
미래에셋대우 8조원 (약 8.2% 수준)
- 2017년 운용자산 기준 세계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 6조 438억 달러  
삼성자산운용 1945억 달러 (약 3.2% 수준)  
우리나라 자산운용사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것은, 가계부문의 자산 대개가 부동산 시장(비생산적)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 반영.  
국내총생산(GDP) 및 국민총소득(GNI) 규모대비(2019년 세계12위) 운용자산규모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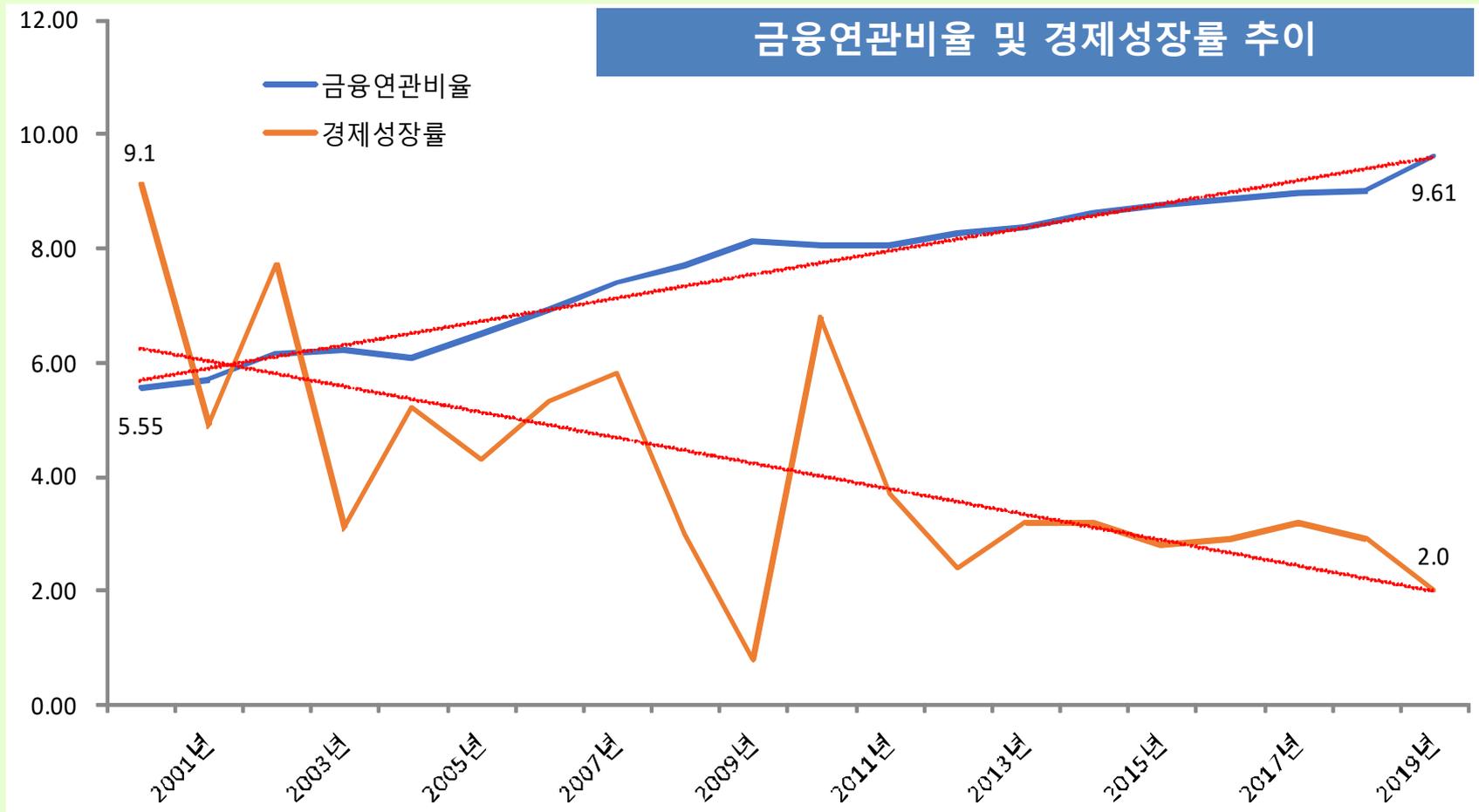
**시사 점 : 한국 금융정책 당국의 잘못된 정책방향**

**"겸업화와 대형화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플레이어 육성"**

- 금융. 보험업(K) 실질부가가치와 총부가가치 내 비중 변화  
 2000년 35.7조원 4.44%에서 → 2019년 103.4조원(2.9배) 6.09%(1.4배)로
- 금융업 고용탄력성은 금융위기 이전 0.15%에서 금융위기 이후 0.07%로 감소,  
 금융통계시스템 금융기관 실질 취업자 수에 의한 고용탄력성은 0.04%  
 (2002~2019년 연평균 값)
-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일자리 창출 기여도 또한 매우 부진함, 최근 5개년 중  
 3개년도가 마이너스 수치를 보였음.
- 금융연관비율은 2000년 5.55배에서 2019년 9.61배로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2007년 이후 금융자산 총액 증가율도 그 추세가 하락 반전하였음.  
 2018년 4.05%로 최저점을 형성(2019년 8.19%로 최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하여, 향  
 후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가능할지 주목됨.)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도 안되고  
 금융연관비율이나 금융자산의 증가율 추세가 우하향하는 등 내용적으로 실속없음**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금융업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금융의 사회적 역할 후퇴.**



**금융구조조정 및 대형화에 따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금융기관 수  
특히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의 총격 심각, 금융배제자 증가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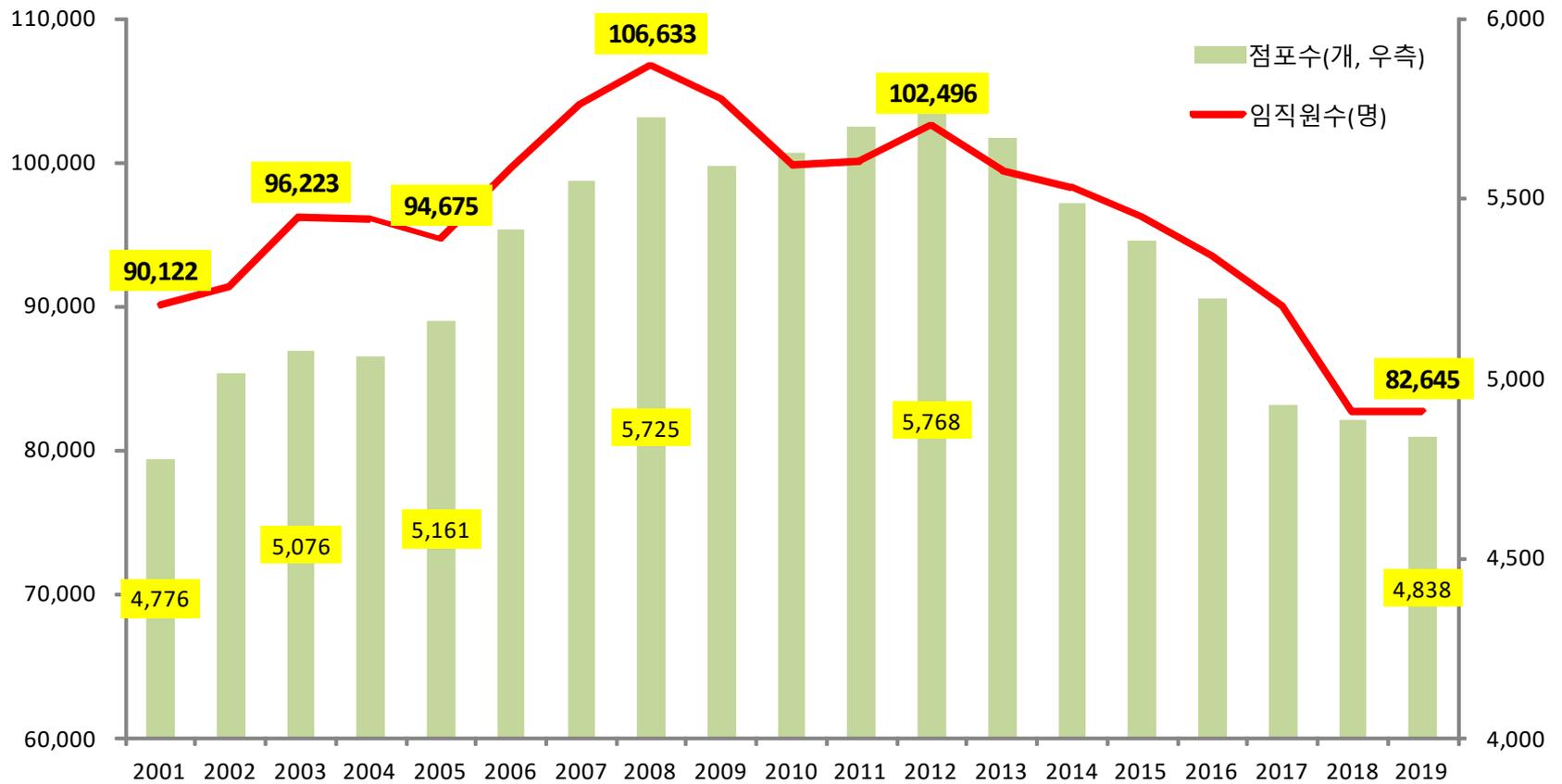
금융권역별 금융기관 업체수 추이

구 분	1997	2001	2006	2011	2016	2019
은행	26	20	18	18	17	19
저축은행	231	122	110	98	79	79
신협	1,666	1,268	1,024	955	904	883
여신전문	68	53	50	64	86	114
생보	33	22	22	23	25	24
손보	17	22	29	30	32	30
증권사	58	61	54	62	53	56
선물회사	-	14	14	7	5	6
자산운용	24	42	49	82	165	86
총금사	30	3	2	1	1	1
합 계	2,153	1,627	1,372	1,340	1,367	1,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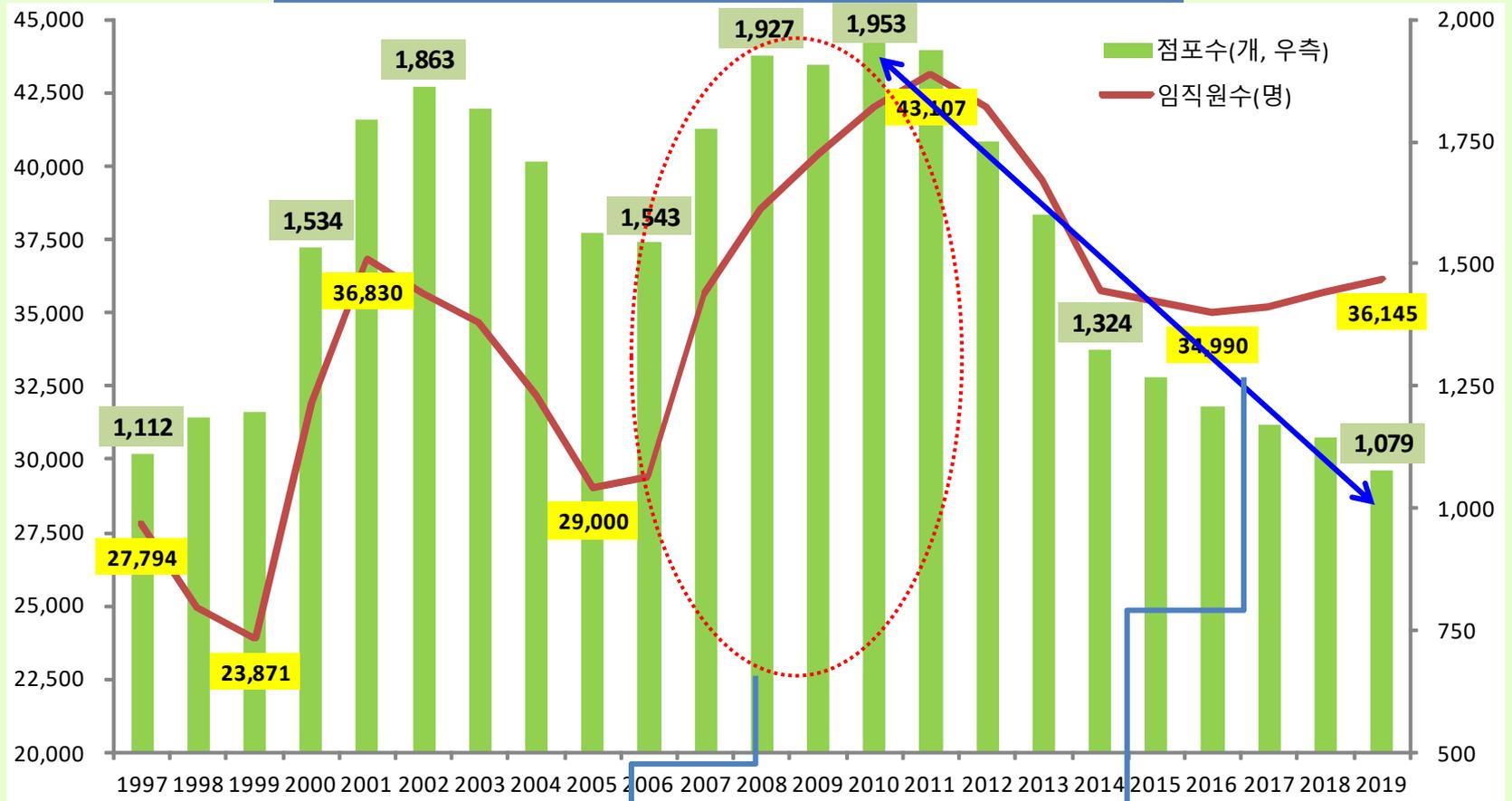
자료) 금융통계시스템, 금융통계월보

주) 은행은 국내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 기준(99년부터 특수은행 포함), 여신전문회사는 신용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를 의미. 연월말 기준으로 권역별 회계연도 고려하지 않음.

## 일반은행 임직원 수 및 점포수 추이



## 국내 증권사 임직원 수 및 점포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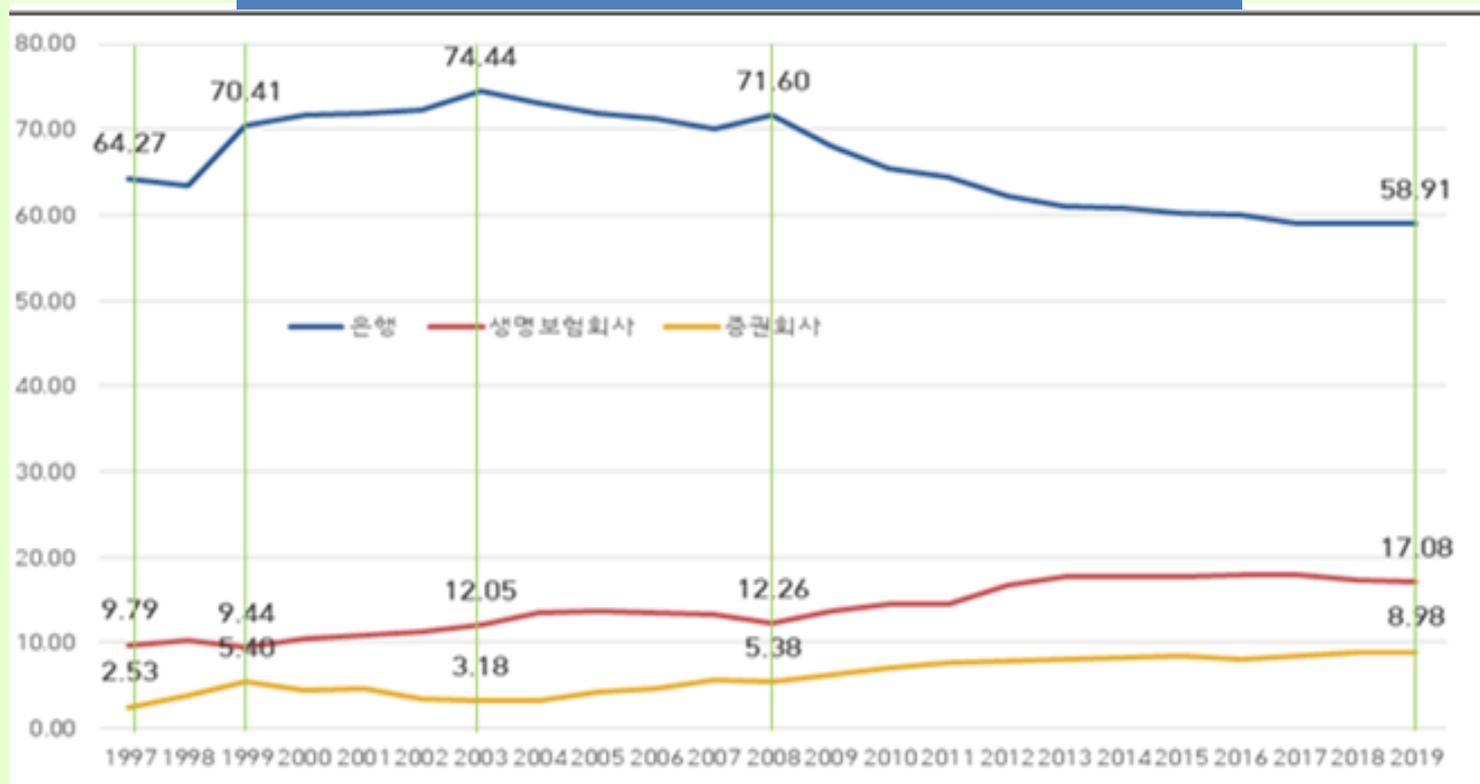


자본시장법제정방안발표  
(2006~2010년) 이후 증가세로 반전

2010년 이후 스마트폰 대량 보급  
MTS 활성화로 점포수 급감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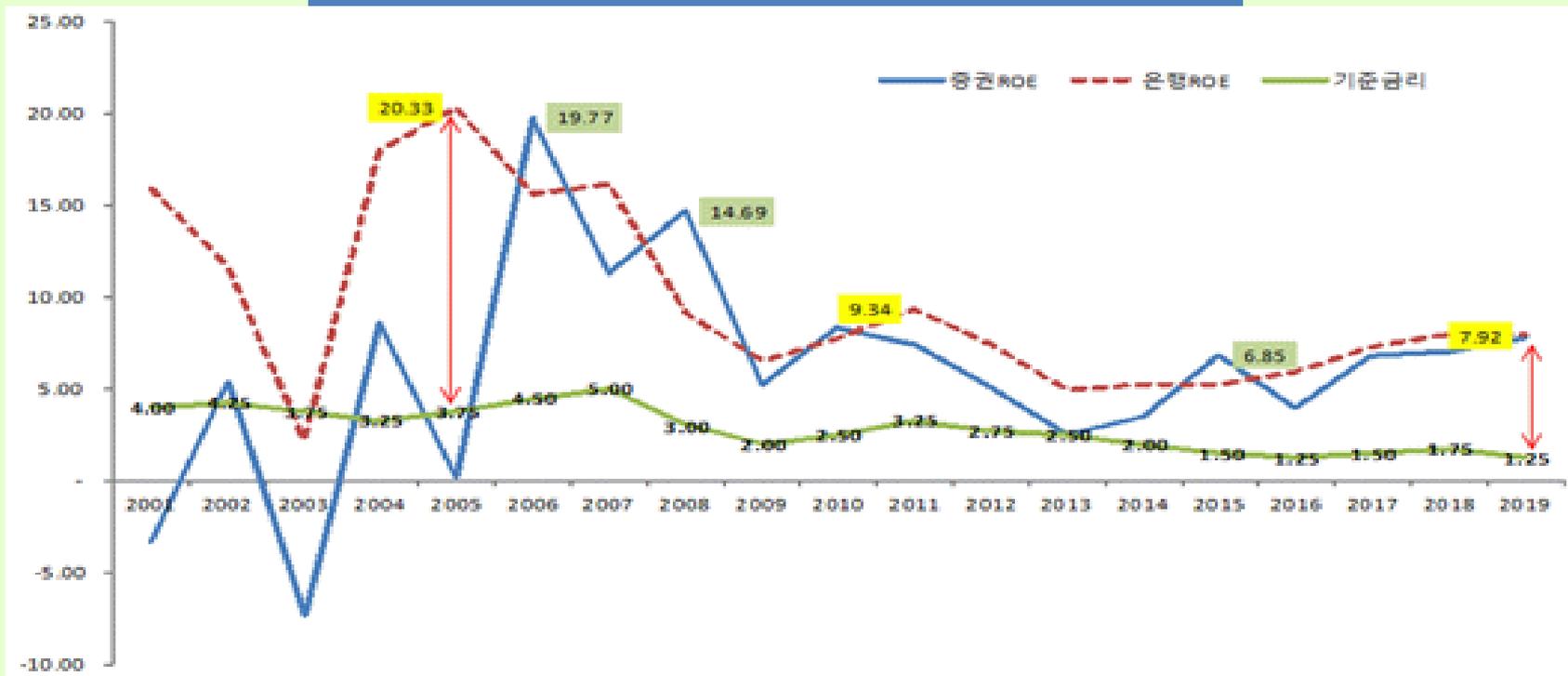
**2000년대 들어 규제완화 등 육성책이 자본시장 중심으로 진행된 결과  
금융업 전체 총자산중 증권업 비중(2.53 → 8.98)이 가장 큰 증가폭 나타냄  
문제는 증권사의 규모 확대가 자본중개기능의 확대에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

주요 금융권역별 총자산액 비중 추이



**은행, 증권 공히 전반적으로 수익성 지표는 좋아졌지만,  
신용팽창이 가계부분과 부동산으로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업의 기본 모순(자금조달의 사회적 성격, 운용에 있어 사적 이윤 추구) 심화됨**

### 일반은행 및 증권사 ROE 추이



- 2012년 약 30만명에 달했던 금융업 취업자수는 2018년 27.4만명 수준으로 감소.  
금융권 총 당기순이익은 2013년 약 10조원에서 2018년 약 33조원으로 3.3배 증가  
금융권 구조조정은 경영환경 악화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 겸업화와 대형화에 추세에 따라 과잉인력과 중복 점포에 대한 상시적 구조조정이었으며,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거래 확산은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
- 금융노동자 70% 이상이 연봉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연봉자 비중도 26.3%(2019년 기준) 10년 이상이 장기근속자 비중도 47.3%(특히 은행은 10년초과 근속자 비중 54.3%이며 20년초과 장기근속자도 30.4%에 달했다.)
- 금융업은 전산업 대비 임금노동자 비중(97.8%)이 높고, 여성노동자 비중(46.5%)도 높은 편 연령별 비중은 30대(37.7%)와 40대 (32.1%)가 69.8%로 압도적 대졸이상인 72.1%로 학력수준이 높은 편(은행 71.9%, 증권 83.7%) 비정규직은 전산업 평균(36.4%)보다 낮음 / 금융업 평균(10.4%) 직무별 비중을 보면 영업/마케팅 59.2%, 경영관리 16.9%, 영업지원 5.4%, 자산관리 3.7%, 자산운용 3.6% 순으로 나타남.  
직무별로 여성 비중은 영업/마케팅 52.9%, 영업지원 45.3%, 보험 36.2% 등으로 전문직 분야 자산운용(27.7%)이나 투자은행(18.2%) 내 여성비율은 적었음

■ IMF에 의한 강제적 구조조정 이후 2020년 현재까지 한국 금융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규제완화, 겸업화와 대형화, 수익성 우선, 선진금융기법'의 자발적 도입

-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 겸업화와 대형화로 한국 금융업 전체에서 금융지주가 차지하는 비중(인력비중 55.72%, 총자산 비중 48.9%)이 커졌지만, 사업다각화나 글로벌 측면의 경쟁력이 강화되지는 못했음.

→ 부작용만 속출, 상시적 인력구조조정 진행, 금융지주의 사용자 성 문제, 금융지주의 파행적인 지배구조(금융지주는 자회사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지만, 문제 발생 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구조)

■ 2006년 한미 FTA 개시 선언과 '자본시장법' 제정방안 발표 :

미 금융자본의 핵심요구인 '신금융서비스'가 협상과 상관없이 자본시장법(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주의 시스템으로 전환) 제정으로 해결됨 (KIKO사태 와 DLS(&DLF)사태의 차이)

기대목표 :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자본중개 기능을 활성화하고, 겸업화에 따라 예상되는 이해상충 문제는 방지체제를 도입하여 해결

결과 : 증권사의 규모만 커졌지, 자본중개 기능 오히려 약화, 지속되는 불완전판매 문제(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라임 등 헤지펀드 상품)

■ 2013, 2015년 : 사모(헤지)펀드 활성화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규제완화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프라임브로커, 신용공여 등 신규 업무 부여) 제도 도입

2015년 헤지펀드 활성화를 위해 자산운용자 진입규제 완전 철폐

라임, 옵티머스 등 헤지펀드 운용사 환매 중단 사태 : 불특정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

구 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설립년도	2000.03.03. (산별노조 출범일)	1995.02.21.	2011.12.15. (산별노조 출범일)
상급단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주요 조직대상	은행	증권, 보험(손,생보), 여수신(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공제조합, 일반사무직 등	
위원장	박홍배	이재진	이재진
조합원수	96,597명 (여성 51,363명)	68,128명 (여성 28,647명)	42,678명 (여성 18,979명)
조직형태	산별연맹	산별연맹	산별노조
조직구성	37개 지부	대산별 1, 소산별 1 41개 기업별노조	5개 업종본부 94개 지부, 9개 지회

□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인 은행업과 증권업 관련하여

- 은행은 금융노조가 인터넷전문은행 2개사를 제외하고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17개 모두를 지부를 두고 있음.
- 증권업은 국내 증권사 45개사 중 사무금융연맹 소속은 총16개사  
(연맹 산하 3개 기업별 노조와 사무금융노조 산하 13개 증권지부)

### ■ 금융구조조정 저지 투쟁 : M&A 및 금융지주사 설립과정서 상시적 인력구조조정 발생

- '주주이익 극대화'가 유일한 경영목표가 되어버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노동자 '인건비'에 불과
- 당기순이익이 양호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던 인력구조조정으로, 상식적 의미의 구조조정과 차이  
인수기업과 피인수 기업을 가리지 않았고, 금융권역 전반에 걸쳐 나타난 현상임
- M&A, 금융지주 출범, 점포통폐합, 지점폐쇄 등 금융권 이슈 모두가 구조조정과 연관, 노조는 년 365일이 투쟁의 날

### ■ 비정규약법 대응 투쟁(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11월 국회 통과)

- 2007년 금융노조산하 우리은행에서 최초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사례 발생(금노와 사무금융연맹의 논쟁 :  
금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안, 사무금융연맹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고착화 시킬  
뿐인 제도)
- 대표적 위장도급(불법파견)사례 코스콤 투쟁 : 475일 간의 장기 파업투쟁 결과 간접고용 타파하고 정규직화 쟁취 첫 사례
- 2011년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통하여 시작된 전략조직화 사업(콜센터 노동자 선정) 지속 추진

### ■ 법제도 대응 투쟁

- 한미 FTA 저지와 자본시장법 전면 재개정 투쟁 : 양노조와 연구단체를 중심으로 금융공대위 구성, 운영됨. 연구팀을 중심  
으로 체계적인 문제제기와 다양한 선전홍보활동, 범국본 투쟁에 적극 결합. FTA 금융부문 협상 문제점을 반대 근거를 논  
리적으로 제시하는데 기여했지만, 자본시장법 문제가 FTA 현안에 가려지는 결과를 낳았음.
- 2008년 이명박 정부 금산분리 완화 저지 및 강만수 장관 퇴진 투쟁(사무금융연맹) : 상근간부 수준이었지만 전 가맹조  
직이 함께하는 투쟁 조직, 강만수 퇴진 성과
- 금융규제 강화 및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활동 : '금융공공성과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금융'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공감대 형성(국제 시민사회는 물론 국내 진보운동 진영과도 상당한 공감대 형성)

### 종합평가 : 금융의 사회적 역할 실종

금융기관의 규모도 커지고 순이익도 대폭 증가했지만, 금융기관이 운영 결과가 한국경제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000년 9.1%에서 2019년 2.0%까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익극대화를 위해 과도하게 개인부문에 대한 대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가계부채나 부동산 버블'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자본시장은 자본중개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동시에 건강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지 못함으로써 한국 가계의 전반적인 자산구조가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쏠리게 만들었다. 한 때 30만 명에 육박했던 금융노동자 수는 2019년 27.6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 노동조합대응 평가와 과제 : 일자리를 지키지 못한 결과 '정성과 노력에 비해 저조한 성과'

첫째, 법제도 변화가 구조조정 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사업장 단위에서 경영진을 상대로 협소하게 진행. '법제도 대응과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연계'하여 함께하는 투쟁으로.

둘째, 구조조정 저지 투쟁이 '희망퇴직금' 협상으로 변질된 측면. 현존하는 일자리라도 지키겠다는 최소한의 투쟁 목표와 원칙을 조직 내부적으로 구축하여 공유하여야 함.

셋째, 그간 노동조합의 '금융 공공성(법제도 대응)' 관련 사업은 '산발적으로,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 노동조합 상근간부 수준에서 부터 금융공공성 의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수용해야 함. 금융 공공성 사업은 조직 내·외부를 모두 포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함.

넷째, 노동조합 내 조직 갈등은 노조 활동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최대 위험 요인. 민주적인 절차와 논의를 거쳐 합의된 결정사항에 대하여 존중하고 수용하는 조직적 기풍 구축해야함.

-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2011)' 시위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중요한 시점임.  
 규제금융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신자유주의 문제점과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
  
- 금융이 사회적 . 법제도적으로 통제받지 못하면 언젠가 반드시 폭발한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임.  
 한편 현재 한국사회에서 금융관료와 금융자본의 무한질주를 통제하고 제어할 유일한 집단이 '노동조합'임  
 → 금융 공공성 관련 사업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여야 함.  
 → 관련 의제는 금융소비자로서의 국민의 관점, 에서 선정  
 (고령금융소비자보호, 핀테크와 정보보호, 정규교육 과정이나 일반인 대상의 금융교육 실행 방안)
  
- 노동조합의 향후 대응 방향
  - ▷ 금융업 전반에 대해 일관성 있는 정책 대응과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양대 노조는 지금까지의 사안별 연대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형태의 협의기구를 구성함과 동시에  
 금융부문에 대한 정책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임.
  
  - ▷ 금융 공공성 의제를 사회적 확산시키고 금융노동자 투쟁에 관한 시민사회의 공감과 지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전략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상설 공동대응기구 만들어야 함
  
  - ▷ 그간의 수세적 투쟁에서 벗어나 공세적 투쟁과 성공하는 투쟁을 만들기 위해 '중요 사업에 있어  
 ①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여, ②사업 명분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③이를 조직원 모두가  
 공유하는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조직 내부에 구축하여야 함